

# 수출 1조 돌파...“전남, 국가 김 산업 중심지로”

## ■ 전남연구원, JINI 인포그래픽 분석

국내 생산량 77.5% 집중...가공·수출 구조 주도

164개국 공급망...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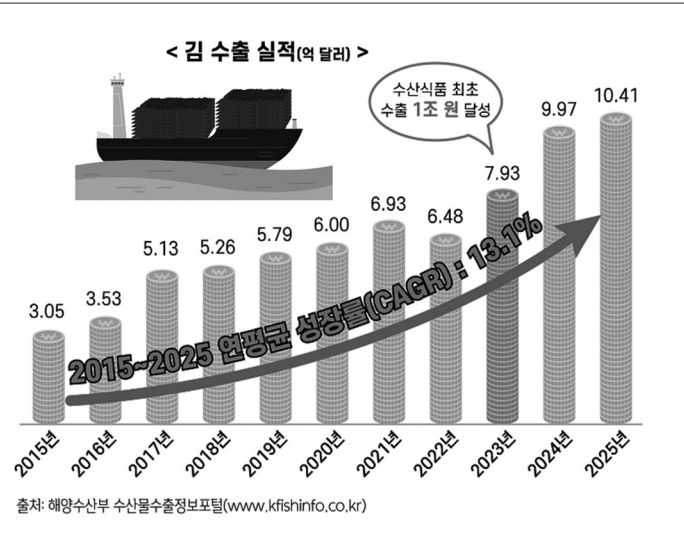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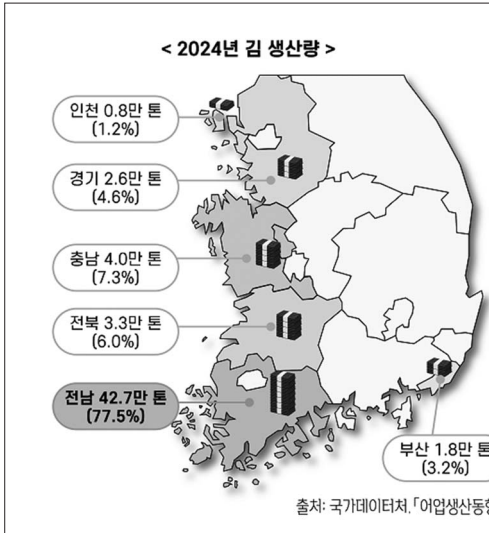
국내 수산물 수출 1위를 지켜온 김 산업이 수출 1조원 시대를 열며 국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생산과 수출의 중심지인 전남에 국가 차원의 컨트론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27일 ‘JINI 인포그래픽-전남 김, 세계에 자리매김’을 통해 국내 김 산업의 생산·수출 구조를 분석하고, 전남의 산업적 위상과 함께 ‘국립김산업진흥원’ 전남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김 생산량은 약 55만t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약 43만t을 생산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김 양식이 1600년대 전남 광양 태인도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도 전남이 생산 기반과 양식 기술을 주도하며 산업 중심지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김은 이제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대표적 수출 효과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김 수출액은 9억9700만달러로, 참치캔(5억8900만달러)을 크게 웃돌았고, 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12억4800만달러)과의 격차도 빠르게 좁히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김 수출은 연평균 1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성장세는 2025년에도 이어져, 11월 기준 김 누적 수출액은 10억4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대상국은 164개

국에 달하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2억3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2억2000만달러), 중국(1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김 산업의 확장은 전남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 2024년

전남의 김 가공품 생산액은 1조4825억 원에 달했으며, 목포·해남·고흥 등을 중심으로 가공·유통 거점이 형성돼 있다.

전남의 김 수출액 역시 약 3억7000만달러로, 전국 대비 비중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전남연구원 김태형 연구위원은 “김은 해조류 가운데 부동의 수출 1위 품목으로, 반도체에 비견될 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전략 산업”이라며 “생산과 수출의 1번지인 전남에 국립 차원의 김 산업 컨트론타워를 두는 것이 산업 고도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전남은 이미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다. 연구원은 김 종자 개발부터 연구개발(R&D), 가공, 수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전남에 구축할 경우, 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JINI 인포그래픽은 전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 이슈를 시각 자료로 정리해 제공하는 콘텐츠로, 전남연구원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 가전기업 10곳 중 7곳 “사업전환 필요”

OEM 한계 인식...ODM·OBM 전환 공감대 확산

판로·자금·기술 역량 공간...정책 지원 연계 필요

지역 가전기업 10곳 중 7곳이 사업전환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판로와 자금, 기술 역량이 실제 전환의 관건으로 꼽혔다.

27일 광주지역인적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가전기업 134개사를 대상으로 ‘광주지역 가전산업 ODM(제조 중심) 생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2.4%가 사업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

답했다.

기업 10곳 중 3곳(34.3%)은 계획은 없지만 전환 의사는 갖고 있는 상태였고, 10곳 중 2곳 가량은 이미 전환을 추진 중(16.4%)이거나 계획을 마련한 단계(15.7%)로 조사됐다.

반면 26.1%는 추진 의사가 없다고 응답. 기업간 격차도 확인됐다.

사업전환 방식은 급격한 구조 변화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주를 이뤘다.

응답 기업 10곳 중 5곳(53.0%)은 기존 사업 비중을 유지하면서 관련 분야를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기존 생산 기반을 활용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단기간 내 대규모 전환보다는 점진적인 구조 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은 분명했다.

기업 10곳 중 3곳 이상(33.6%)은 신규 판로 개척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도 10곳 중 3곳(28.4%)에 가까웠다. 신규 업종에 대한 전문 기술과 정보 부족, 인력 확보 곤란 역시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광주 가전산업이 처한 구조적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지역 가전산업은 오랜 기간 OEM 중심 생산까지 역할을 해왔지만 단가 압박과 물량 변동에 따른 수익성 한계가 누적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다.

단일 거래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재확인됐다.

지난 2023년 대우위니아 사태 이후 확산된 생산·고용 불안 역시 사업전환 필요성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관세

부담 증가, 대기업 생산 물량 조정까지 겹치면서 단순 생산 중심 구조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기업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책 연계에 대한 기대는 뚜렷했다.

사업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 의사를 조사했는데 기업 10곳 중 8곳 이상(83.5%)이 장려금과 고용환경 개선, 기업지원,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참여 경험 비율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로, 전환 국면에 있는 기업일수록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요구한 정책 지원 분야로는 시제품 개발과 제품 양산화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고용 지원과 판로 개척, 정책 대상 산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ODM·OBM 전환을 위한 기술·설계 역량 확보와 함께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농협 전남검사국,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점검

내달 12일까지 농·축협 대상...내부통제 이행사항 확인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전남검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농·축협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별점검과 내부통제 이행사항 점검에 나섰다.

전남검사국은 지난 26일 서영암농협을 방문해 식품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임직원들에게 안전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철저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전후 식품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보관·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금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점도 점검 강화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남검사국은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농·축협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부적합 상품의 진열·판매 △비위생적 보관·취급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와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전반도 점검한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전남검사국은 지난 26일 서영암농협을 방문해 식품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임직원들에게 안전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철저 이행을 당부했다.

점검한다.

편지형 전남검사국장은 “농업인의 정성과 노력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가 농협과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KISA-자동차안전연구원 등

미래차 사이버보안 매뉴얼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자동차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발간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차량 사이버보안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국제표준 기반 자동차 사이버보안 테스트 및 검증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율주행, 통신 연결 기능 등 자동차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은 미래 차 시대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와 국가 핵심 산업의 사이버보안 내재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차 안전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공동 개발해 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3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분석 및 위험 평가 매뉴얼’의 연장선으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수행해야 할 테스트·검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도 매뉴얼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농협 전남본부는 매달 27일을 ‘닭고기 먹는 날’로 정례화한 소비촉진 행사 ‘동심달달(同心達達)’을 추진한다.

## 농협 전남본부, 국내산 닭고기 소비 활성화 ‘온힘’

매달 27일 ‘닭고기 먹는 날’ 정례화...‘동심달달’ 추진

전남농협이 국내산 닭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데이 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 농협 전남본부는 매달 27일을 ‘닭고기 먹는 날’로 정례화한 소비촉진 행사 ‘동심달달(同心達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심달달’은 동심협력(同心協力)에서

작업한 명칭으로, 농협이 2026년 핵심가치로 내세운 상생 기조에 맞춰 축산물과 농산물을 연계해 소비를 확대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정례 캠페인으로 운영해 지속 가능한 소비촉진 모델로 정

착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번 ‘동심달달’ 행사는 전남에서 처음 시도하는 닭고기 데이 마케팅”이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달 27일을 중심으로 농·축산물을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를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소득 3000만원 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농관원 전남지원,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

내달 13일까지 남도장터 등 온라인몰 중점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물 등 설 명절 선물용 농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남지원은 최근 온라인몰을 통한 농식품 구매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도장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지자체 온라인몰은 지역 특산물 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속 과정에서는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도 병행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기간 소비가 많은 축산물과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 대추·밤 등 제수용 원산물에 대해서는 전남도, 관세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를 구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과 온라인 유통 등 단속 취약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